

국민권익위, 대한민국 예산 “투명성 세계 11위, 국민 참여도 세계 1위, 감시 세계 3위 기록”

- 국제예산협의회(IBP), 5월 31일 2021년도 열린예산조사(OBS) 결과 발표 -

(2022. 6. 13., 국민권익위)

국제예산협의회(IBP,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열린예산조사(OBS, Open Budget Survey) 결과에서 대한민국은 ‘예산 투명성’에서 120개국 중 세계 11위(74점/100점 만점), ‘국민 참여도’ 세계 1위(59점), ‘감시’ 세계 3위(87점)를 기록했다.

이는 예산 투명성만 볼 때 2019년 117개국 중 29위, 62점에 비해 순위로는 18단계, 점수는 12점 상승한 수치다.

국제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997년 설립된 비영리단체(NGO)로 세계 각국의 학계 및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됐으며 미국 워싱턴,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케냐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협의회는 세계 각국의 정부예산시스템에 대한 시민의 정보 접근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예산 체계에 대한 투명성, 참여도, 감시 기능을 측정해 2006년부터 격년으로 열린예산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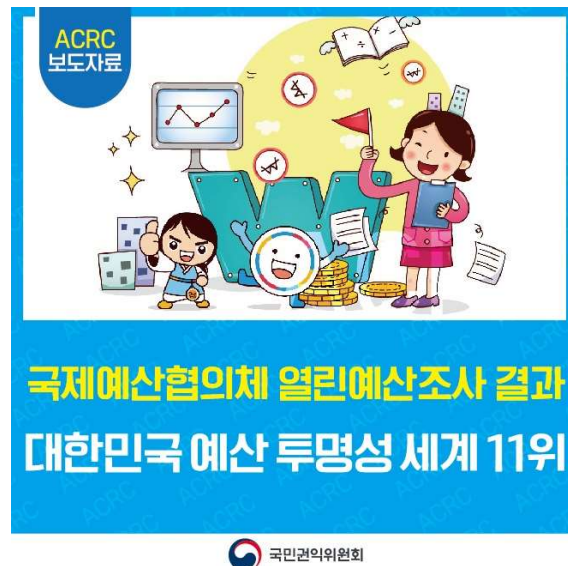
열린예산조사 결과 중 ‘예산 투명성’ 항목은 정부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예산 통제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측정한다.

‘국민 참여도’ 항목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시민참여 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측정한다.

‘감시’ 항목은 의회와 사법부의 예산에 대한 감시기능 및 정도를 측정한다.

협약체의 열린예산조사 결과 보고서는 “대한민국은 참여 예산 집행에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국민, 시민사회, 공무원이 협력하고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며, 예산의 개방성 및 공공데이터 사용 확대를 위한 노력의 최전방에 있는 국가라고 평가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투명한 예산 시스템 운영과 시민의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시민에 의한 예산 감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공적 자금 남용이 방지된다면 한국의 청렴 선진국 진입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유엔개발계획(UNDP), 대한민국 주요 반부패정책 유럽·중앙아시아에 전파

- 23일 온라인 간담회 통해 코소보 등 4개국 '부패방지시책평가' 등
도입 성과 및 교훈 공유 -

(2022. 6. 24.,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유엔개발계획(UNDP)는 23일 코소보, 몰도바, 몬테네그로, 우즈베키스탄 4개국과 우리나라 주요 반부패 정책 도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온라인 화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권익위가 2015년부터 UNDP와 공동으로 한국의 반부패정책을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전파해 온 협력사업의 성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양가 티밀시나 UNDP 글로벌 반부패 프로그램 자문관, 게르트 트로게만 UNDP 이스탄불 유럽·중앙아시아 지역허브 소장 및 코소보, 몰도바, 몬테네그로, 우즈베키스탄 4개국 UNDP 사무소 대표가 참석해 그간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반부패정책을 도입한 유럽 및 독립국가연합 지역에서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지역 간 포럼을 통해 성공사례뿐 아니라 도전요인과 시행착오를 공유함으로써 반부패 제도가 자국 내에서 자리를 잡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코소보와 우즈베키스탄 대표는 각국의 한국 반부패정책 도입 진행 상황 및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코소보는 2019년에 국민권익위로부터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전파받은 바 있다. 현재 코소보는 자국 반부패청에서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시험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법제화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 입법 단계에서 법령 내에 내재해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부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

또 국민권익위는 2019년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에 부패방지시책평가*를 전파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올해 1월부터 대통령령81호 공포를 통해 부패방지시책평가를 제도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부패방지시책평가를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이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반부패·청렴 활동과 그 성과를 측정하는 제도. 2002년부터 시행됐으며 올해부터 기존의 청렴도평가와 함께 종합 청렴도 평가로 통합·개편해 시행

국민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반부패정책 등 제도 도입만으로는 그 성공이 보장되지 않으며 각국이 자국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문제점을 시정해가며 제도의 정합성을 높여가는 것이 관건이라는 점을 공유하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층 높아진 세계 속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맞게 한국이 부패 극복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이를 필요로 하는 개도국에 전파해 반부패 연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첫째행 (좌) 이스탄불 지역 허브 거버넌스와평화구축팀장 (중앙) 앙가 티밀시나 undp 반부패자문관 (우)안네 유프너 undp 소장대행

둘째행 (좌) 이라클리 코테 티쉬빌리 이스탄불 지역 허브 반부패 공공행정 정책관 (중앙) 원영재 국제교류담당관 (우) 이아정 undp 서울정책센터 정책관

셋째행 (좌) 게르트 트로게 만 undp 이스탄불 지역 허브 매니저 (우) 마토 마이어 undp 코소보 국가사무소 정책관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안내서 마련

공공기관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및 국제 반부패 규범 대응
강화... 기관 진단·교육도 지원 예정 -

(2022. 6. 10.,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과 해외부패방지법 등 국제 반부패 규범 대응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안내서가 30일 공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이 경영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을 최소화하고 부패방지 법령을 준수하는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K-CP) 안내서를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국민권익위는 ESG 공시 및 투자가 중요해지고 국내 기업의 미국 해외 부패방지법 위반 사례도 계속 발생하는 만큼 ESG의 핵심 요소인 반부패에 대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 유럽연합(EU)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지침(CSRD) 등 국제 ESG 공시기준에 ‘반부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난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선정한 4대 의제에도 ‘반부패’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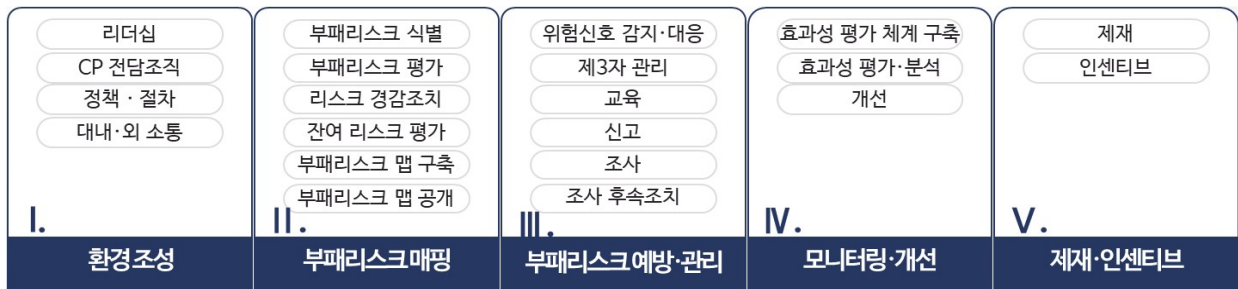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에 따라 청렴윤리경영 지원사업을 해왔으며 지난해부터 국내·외 문헌 분석,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K-CP 개발을 추진해 왔다.

K-CP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국제 반부패 기준에 맞는 청렴윤리경영 체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부패위험을 예방·탐지·개선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K-CP는 ▲ 환경 조성 ▲ 부패 리스크 매핑(mapping) ▲ 부패 리스크 예방·관리 ▲ 모니터링 및 개선 ▲ 제재 및 인센티브의 5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다.

* OECD·TI·UNGC 등 국제기구와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반부패 안내서,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법령 및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K-CP) 구성체계 >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이 K-CP를 적극 실천하면 부패,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통한 사익 추구, 회계 부정, 방만 경영 등을 예방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K-CP 도입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위해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국가청렴도(CPI) 향상을 위해 민간기업용 K-CP 안내서도 올해 연말까지 개발해 민간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ESG 경영과 국제 반부패 규범 강화에 발맞춰 공공기관부터 청렴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노력’ 반영해 평가

- 측정항목·평가지표 확정된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573개 평가 대상기관에 알려 -

(2022. 6. 10., 국민권익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해충돌방지제도
가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2022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에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노력’을 반영해 평가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종합청렴도
측정항목과 평가지표를 확정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해 573개 평가 대상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올해부터 ▲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내
부직원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 ▲각급기관의 1년간 반부패 추진
실적 및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공직자 징계 등 부패현
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로 구성된다.

국민권익위는 워크숍, 간담회 등 기관 의견수렴, 각종 시뮬레이션 등
을 통해 기관유형 구분, 평가영역별 반영비중 및 점수 체계, 청렴노력
도 평가지표 등 실시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은 15개 유형, 총 573개며, 중앙행정기
관은 장관급(25개), 차관급(21개)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합계 (개)	중앙행정		사·도 경찰청 (시범)	지방자치단체			사·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국립 대학	공공 의료	
	I (장관급)	II (차관급)		광역	기초			I (공기업)	II (준정부 일반)	III (준정부 중소형)	IV (중점)	V (지방 공사업단)			
					I (시)	II (군)									III (구)
573	25	21	18	17	75	82	69	17	36	57	37	30	39	33	17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반영비중은 60:40(총점 100점), 부패실태 평가 결과에 따른 감점 범위는 10점+ α (정성평가)로 확정했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유형별로 산정된 기관별 최종등급으로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며, 필요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의 등급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원년인 만큼 각급 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준수 노력을 모든 영역에 걸쳐 평가요소로 포함시켰다.

청렴체감도에는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를 통한 특혜제공, 업무과정에서의 사익추구를 설문조사 항목에 반영했다.

청렴노력도에는 관련 반부패 규정 정비 및 교육,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등 기관의 제도 안착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를 마련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실시하는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실태점검이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 관련 지표도 신설했다.

부패실태 평가 시에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포함해 기관 총점에 감점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는 지난 20년간 운영해 온 청렴수준 평가제도를 통합 개편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향후 2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카자흐스탄에 부패영향평가 등 한국의 선진 반부패 정책 전수

- 한국의 반부패 정책에 관심 높은 카자흐스탄 요청으로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신설 -

(2022. 6. 9.,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청렴도평가, 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경험을 카자흐스탄에 전수하는 온라인 연수과정이 개설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카자흐스탄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반부패청 직원을 대상으로 6월 7일부터 9일까지 비대면 화상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2월 카자흐스탄 반부패청(Anti-Corruption Agency)이 부패영향평가, 청렴도평가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제도 전수를 요청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에는 카자흐스탄 반부패청 본부뿐 아니라 10개 지청과 3개 공기업에서 44명의 실무급 직원이 참여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올해 5개년 반부패 전략을 채택하여,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포괄적·심층적 노력 추진,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 구축, 강력하고 엄정한 부패방지 대책의 전방위적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과정은 부패영향평가, 청렴도평가, 신고자 보호제도 등 카자흐스탄의 반부패 전략과 관련해 유효한 정책이나 법령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연수는 부패영향평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해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해 부패발생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는 법령 등 제·개정안

의 준수·집행·행정절차·부패통제 4가지 분야의 이해충돌가능성 등 총 12개 항목으로 부패유발요인을 평가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그간 국민권익위는 대표적인 부패방지 정책도구인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인도네시아, 몽골, 미얀마 등 6개국에 전수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연수가 한국의 반부패 제도를 카자흐스탄과 공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카자흐스탄 등 우리 정부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대상국들과 반부패 분야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